



# 출판물의 전자와 인용



## 1.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 ▲ 2013-109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 〈주문〉

경북도민일보 2013년 3월 27일자 5면 「경찰 ‘성접대 의혹’ 수사 본격 진행」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유〉

1. 경북도민일보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찰이 건설업자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여성사업가 A(52)씨로부터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추적하는 등 영상 원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모(52)씨와 A씨의 주변인물이 다른 형태의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을 보관 중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인물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누구인지 등을 추적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을 제출한 A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동영상 원본을 찾아내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의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는 열쇠를 윤씨가 쥐고 있어 조기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제출한 동영상의 이미지와 성문 분석을 통해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결과를 25일 내왔다.(후략)/정○○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26일 22:56 송고한 「경찰, '성접대 의혹' 동영상 촬영자·여성 추적(종합2보)」 제목의 기사의 14개 단락 중 4개 단락을 뺀 나머지 10개 단락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북도민일보는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경북도민일보는 같은 위반행위로 신문윤리위원회 제861차, 제862차, 제863차 회의에서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1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3년 4월 15일자 29면 「9K 3안타 ... 괴물 '원맨쇼」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 헤럴드경제 4월 15일자 30면 「"베이브 류스! ... 류현진 실력으로 모든걸 보여주다」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파이낸셜뉴스 4월 15일자 29면>



<헤럴드경제 4월 15일자 30면>

파이낸셜뉴스와 헤럴드경제는 각각 AP 보도사진을 연합뉴스가 받아 제공한 위 적시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3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13년 5월 9일자 5면 「日 수로부 1879년 측량보고서에 독도는 없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한다.

〈이 유〉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7세기 중반부터 독도를 영토 일부로 인식해 왔다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은 일본 해군 수로부가 1879년에 오키(隱岐) 열도 측량 당시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입증하는 19세기 일본 공식 자료를 8일 최초로 공개했다.

1879년에 일본 해군 수로부의 기모쓰키 가네유키가 제작한 '오키열도 측량 보고서'인 '은기회항약기'(隱岐回航略記)에는 오키 열도의 위치를 북위 35도 57분~36도 18분, 동경 132도~133도 23분으로 기록했다. 오키 열도의 범주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오키 섬은 일본 시마네 반도의 북쪽 약 50km에 있는 섬으로, 독도에서 약 157km 떨어져 있다.

한철호 대외교류연구원 원장(역사교육과 교수)은 "오키 열도를 포함한 북서안 측량의 책임자인 기모쓰키가 독도를 오키의 소도에 속하는 179개 섬 중의 하나로 인식했다면 그 북쪽 한계에 있었던 독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북위와 동경의 위치도 넓혀 잡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후략)/김○○ 기자』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8일 10:36 송고한 「日 수로부 1879년 측량보고서에 독도는 없었다」 제목의 기사에서 마지막 2개 문장을 제외하고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위 신문은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도민일보는 신문윤리위원회 제861차 회의에서 부산일보가 단독 보도한 「잠적 보름 만에 입 연 김무성」 제목의 기사를 표절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제861차, 제862차, 제863차 회의에서 통신기사 표절로 ‘주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제864차 회의에선 같은 위반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 ▲ 2013-113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무등일보 발행인 김 명 술
2.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3. 全光日報 발행인 박 양 주

### 〈주문〉

무등일보 2013년 5월 10일자 3면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안된다」는 사고 제목의 기사, 경남매일 5월 14일자 1면 「STX 자금지원 난항」 제목의 기사, 全光日報 5월 16일자 3면 「5·18, 세계와 나누고 싶은 역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유〉

1. 무등일보, 경남매일, 全光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무등일보)=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불과 열흘 앞두고도 공식 식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5월 3단체(5·18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유족회)와 5·18 기념재단, 정치권 등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박승춘 보훈처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보훈처장의 그릇된 역사의식 때문에 5·18이 배척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보훈처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호실장 출신으로 비자금 조성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에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11년 8월 심의위원회 위원인 보훈처 소속 국장에게 “고인은 안장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안씨에 대해 ‘장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박 처장이 2011년 12월 광복회 워크숍 강연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다들 아시겠죠”라고 말했다며 야당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후략) 주○○ 기자』

(경남매일)= 『(주)STX에 대한 자율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주)STX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중 자율협약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온 곳이 한 곳도 없다.

당초 산은은 채권은행들에게 오는 14일 회사채 2천억원 만기가 돌아오는 것

을 감안해 가능하면 지난 10일까지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달 STX조선해양 긴급지원에 대한 동의 여부도 산은의 요청보다 며칠 늦게 확답이 오지 않았느냐”며 “오늘 중에는 동의서가 모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STX 지원에 관한 채권은행들의 속마음은 복잡해 보인다. 한 채권은행 부행장은 “상반 논리가 있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험을 감안하고 높은 이자를 받던 회사채 투자자들을 은행들이 보호해주는 것은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정부는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을까 봐 결제를 다 해주는 쪽으로 정한 것 같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 교란행위”라며 “개인이 판단해서 투자했다면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후략) 〈황○○기자〉

(全光日報)= 『“5·18은 세계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역사)입니다”

게타추 엔기다(Getachew Engida·에티오피아) 유네스코 사무부총장이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엔기다 사무부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젊은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목숨을 잃었다”며 “이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5·18민주묘지에 오게 된 것은 좋은 경험이며 참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유네스코의 주요 가입국 중 하나다. 세계인권도시포럼과 5·18 때문에 광주를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한국의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발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후략) 〈곽○○기자〉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 중 무등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9일 11:20 송고한 「〈보훈 처장의 역사의식은? … 5·18 앞두고 비판 쏟아져〉, 경남매일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13일 17:47 송고한 「(주)STX 자율협약 난항… “회사채 대신 상환은 시장교란”(종합)», 全光日報 기사는 뉴시스가 5월 15일 13:11 송고한 「유네스코 사무 부총장 “5·18 세계와 나누고 싶은 역사”」 제목의 기사의 대부분을 각각 그대로 전재,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일부 다른 기사를 덧붙인 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들은 기사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등일보, 경남매일은 신문윤리위원회 제861차, 제862차, 제863차 회의에서, 全光日報는 제862차, 제863차, 제864차 회의에서 각각 통신 기사를 표절한 행위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 ▲ 2013-117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新亞日報 발행인 김 명 수
2. 全光日報 발행인 박 양 주
3. 무등일보 발행인 김 명 솔

### 〈주문〉

新亞日報 2013년 6월 3일자 1면 「국정 키워드 ‘창조경제·국민안전’」 제목의 기사, 全光日報 6월 11일자 2면 「전남도, ‘사파리 아일랜드’ 감사원 감사 반박」 제목의 기사, 무등일보 6월 13일자 4면 「“北수석대표로 김양건 요구 문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유〉

1. 新亞日報, 奎光日報, 무등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新亞日報)= 『오는 4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오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와 ‘국민안전’ 두 가지다.

이것은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창조경제는 경제부흥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최대 동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취임사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헌신하신 위대한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다”며 “제2의 경제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경제 살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개발과 성장’의 기억을 되살리는 효과를 낳았다. 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경제성장의 신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후략) 장○○기자』

(奎光日報)=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사파리 아일랜드’(옛 동물의 섬)와 관련, 감사원이 막대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 전남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타당성 판단을 위한 경제성 분석이 당초 부정적으로 도출됐으나, 7

역여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 도의 입김이 반영되면서 최종보고서는 “사업성이 양호하다”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은 당초 0.73에서 1.08로, 순현재가치(NPV·평생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는 284억 원 적자에서 116억 원 흑자로, 내부수익률은 4.5%에서 6.4%로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소위 ‘갑’의 위치인 도가 용역업체에 “민간측면의 사업성을 높여줄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후략) <문○○ 기자>』

(무등일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12일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을 북측 수석대표로 나오라고 했던 우리 정부의 요구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사로 활동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상임고문, 이재정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한목소리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김양건 부장은 장관급이 아니라 우리 정부(체제)에 구태여 대입시킨다면 부총리급”이라면서 “(남북 직제의 차이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차라리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동영 고문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통일선전부장은 국정원장과 통일장관을 합친 직책으로 통일부 장관보다는 국정원장이 맞상대”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수석 대표로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보내려했던 데 대해 “작은 것에 연연해 기싸움하다 큰 판을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후략) 서울=김○○ 기자』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 중 新亞日報 기사는 뉴시스가 6월 2일 05:00 송고한 「[박대

통령 100일] 국정운영 핵심키워드 ‘창조경제’ ‘국민안전’, 全光日報 기사는 뉴시스가 6월 10일 14:36 송고한 「전남도, ‘사파리 아일랜드’ 감사원 감사 반박」, 무등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2일 11:42 송고한 「박지원 “김양건 고집한 게 문제 … 총리급 격상 제안”(종합)」 제목의 기사의 대부분을 각각 그대로 전재,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일부 다른 기사를 덧붙인 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들은 기사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17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 〈주문〉

부산일보 2013년 6월 14일자 12면 「스노든 폭로로 미 중 해킹 공방 역전… 수세 몰린 미국」 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6월 17일자 15면 「이란 대통령 성직자 출신 중도와 로우하니」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사이버 해킹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지만, 최근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해킹을 해온 것이 폭로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모호해져 버렸다.

관측통들은 오히려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이 중국을 해킹했다’고 폭로해

수세에 몰린 쪽은 선제공격을 한 미국이 돼버린 형국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장군 명군식’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사이버 해킹 문제에 대해 조만간 공동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됐던 사이버 해킹 문제와 관련해 “중국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측이 군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주요 정보망에 대한 광범위한 사이버 해킹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자 곧바로 반격을 가한 것이다. 당시에는 미국의 공격에 역공을 가한 것으로만 해석됐다.

하지만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운용하는 전 세계 첩보 감시망 ‘프리즘’의 존재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1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NSA가 2009년 이후 홍콩과 중국의 표적 수백 건에 대해 해킹을 해왔다”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후략) 최○○ 기자』

(국제신문)=『이○○ 기자

성직자 출신의 중도파 후보, 하산 로우하니(64)가 제11대 이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란 내무부는 15일(현지시간) 로우하니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수 3670만 4156표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861만3329표(50.71%)를 얻어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2위를 차지한 보수파 모함마드 바케르 칼리바프(51) 후보가 얻은 표(607만7292표)의 3배가 넘는 표를 획득했다.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복심’으로 알려지면서 낙승이 예상됐던 사이드 잘릴리(47) 후보는 416만8946표(11.36%)를 얻어 3위에 그쳤고, 388만4412표(10.58%)를 얻은 모흐센 레자이(58)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보수파의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67) 후보와 최고령 모함마드 라지(72) 후보가 5, 6위를 차지했다.

로우하니 후보의 낙승으로 중도파 로우하니와 보수파의 칼리바프, 잘릴리가 치열하게 경쟁해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애초 예상은 빗나갔다. 이란 대통령 선거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로 최종 당선자를 결

정한다.

로우하니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꾸준하게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개표 40% 상황에서 득표율이 49.9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표 30% 이후부터는 줄곧 최소 50%의 득표율을 유지했다. 헌법수호위원회의 압바스 알리 카드코다이 대변인은 전날 “이번 선거에서 어떤 부정이나 위법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후략)』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각 신문사의 해외 특파원이 송고한 것이 아니다. 부산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4일 04:54 송고한 「〈스노든 폭로로 시진핑 ‘우리도 피해자’ 주장 관심〉」 제목의 기사를, 국제신문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6일 02:32 송고한 「이란 새 대통령 중도와 성직자 로우하니(종합)」 제목의 기사를 각각 부분 수정하거나 또 다른 외신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기사와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를 일부라도 전재 또는 인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표절 행위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20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무등일보 발행인 김 명 술
2. 新亞日報 발행인 김 명 수
3. 奎光日報 발행인 박 양 주

### 〈주문〉

무등일보 2013년 8월 1일자 3면 「교육부, ‘지방대 육성방안’ 지역 대학 반

응/「환영하지만 법제화 시급」 제목의 기사, 新亞日報 8월 19일자 3면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입장차」 제목의 기사, 全光日報 8월 19일자 1면 「전남도, 수상비행장 건립 '승부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유〉

1. 무등일보, 新亞日報, 全光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무등일보)= 『교육부가 31일 '지역인재 전형' 등을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따르면 '지역인재 전형'과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이 핵심적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늘리기로 했으며 동시에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지방대학들이 갈수록 심화하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이탈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줄곧 주장해왔다.(후략) 최○○ 기자』

(新亞日報)=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국정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책을 놓고 여야의 시각이 판이해 향후 정치적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현재 새누리당은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결산국회와 정기국

회까지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의 방해로 국정원 국정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특별검사 수사 쪽으로 점차 기수를 돌리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출석을 차단한 점에 안도하며 남은 2차례 청문회(오는 19일, 21일)를 거쳐 국정조사 최종일인 2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19일 나머지 증인들이 출석하는 2차 청문회까지 열면 민주당 원내외 병행투쟁의 명분도 약해진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정원 국정조사 마무리 시점이 다가올수록 원내외 병행투쟁 마무리 및 결산국회·정기국회 협의를 놓고 벌어질 민주당과의 협상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후략) 김○○ 기자』

(全光日報)= 『전남도가 정부의 항공·레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수상비행장 건립을 적극 추진키로 해 수도권, 새만금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항공·레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지자체 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희망 지자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0월 중 거점 도시를 지정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광 수요가 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토 서남권을 아우를 수상비행장을 건립키로 하고 구체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후략) <문○○ 기자』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 중 무등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7월 31일 15:13 송고한 「광주 전남대학 “지방대학 육성 법제화 시급”」, 新亞日報 기사는 뉴시스가 8월 18일 13:29 송고한 「[종합] 국정원 국조 여야 입장차 … “할 만큼 했다”vs“특검 가자”」, 奎光日報 기사는 뉴시스가 8월 18일 13:25 송고한 「전남도, 수상비행장 건립 ‘승부수’」 제목의 기사의 대부분을 각각 그대로 전재,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일부 다른 기사를 덧붙인 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들은 기사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등일보, 奎光日報는 제865차, 제866차 회의에서, 新亞日報는 제866차 회의에서 각각 통신 기사를 표절한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 ▲ 2013-1205 신문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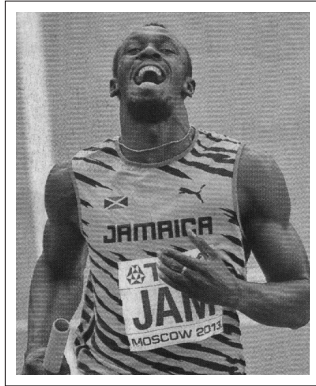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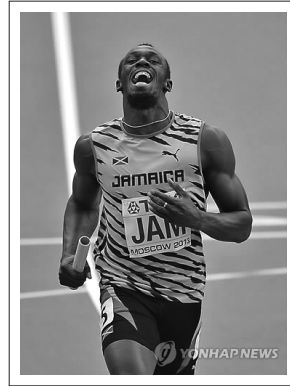
한국경제 2013년 8월 19일자 A35면 「볼트, 사상 첫 두차례 ‘3관왕’」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한국경제가 게재한 적시 사진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 8월 19일자 A35면



연합뉴스

##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28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상일보 발행인 배 명 철

#### 〈주문〉

경상일보 2013년 10월 31일자 4면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경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국정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공판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으로 확대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식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배경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덧붙였다.(후략) 김○○ 기자』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상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10월 30일 11:23 송고한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종합)」의 13개 단락 중 5개 단락을 일부 순서와 사소한 표현만 바꾼채 전재하고, 그 뒤에 연합뉴스가 같은 날자 11:45 송고한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에 여야 ‘온도차’」 제목의 기사의 대부분을 덧붙여 4면(정치면) 톱으로 게재한 것이다.

위 신문은 기사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기사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하였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9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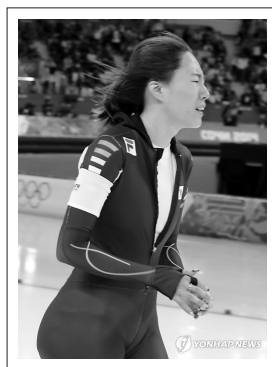
〈주문〉

경남매일 2014년 2월 13일자 1면 「이상화 올림픽 신기록 쾌거」, 「김연아 두 번째 대관식 준비」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경남매일 2월 13일자 1면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사진

경남매일은 연합뉴스가 2월 12일 01:50과 11:26에 각각 송고한 빙상스타 이상화 사진과 김연아 사진을 전재하거나 트리밍해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 2013-1097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 〈주문〉

경남매일 2013년 4월 9일자 3면 「박한철 “공안 업무 1년도 안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유〉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7년간 검사 재직 시 공안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야권에서 불거진 ‘공안검사’ 논란을 일축했다.

또 “5·16은 군사정변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수많은 결정문에서 군사쿠데타라고 칭한 바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 재직 시절에 대해서는 “20여회에 걸쳐 이른바 ‘촛불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

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새로운 ‘사상 검증’으로 떠오른 5·16에 대한 평가 요구에 “군사정변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자기집권 시도 과정에서 위헌적 긴급조치 남발 등 국민기본권 억압, 정경유착 등 부정적 평가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후략) <이○○ 기자>』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헤럴드경제가 4월 8일자 6면에 게재한 「박한철 “공안 업무 1년도 안했다”」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취재기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배경설명을 넣어 작성한 스트레이트성 기사다. 그런데도 경남매일은 이 기사를 옮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사 기사가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16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박진열

#### <주문>

한국일보 2013년 6월 19일자 23면 「성범죄 법령 강화 이후 과제 크다」 제목

의 사실에 대해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조처한다.

## 〈이유〉

###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사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성범죄자는 앞으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 또는 신설돼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제기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성범죄자의 처벌과 사후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망라한 내용이 드디어 입법화됐다. 성범죄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중용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따르고 고소 취하 가능성으로 인해 수사도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시대 변화에 뒤진다는 비판이 높았던 성범죄 관련 법률이 늦게나마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환영한다.

법률 토대를 강화한 것만으로는 성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함께 달라져야 한다. 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다.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수 백 명의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변종 성매매 업소들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이렇게 손쉽게 성을 사고 파는 현실은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흐릴 수 있다.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들이 음란물에 탐닉하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률 조항 강화와 함께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성범죄자의 관리와 재범 방지도 중요하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의 등록·관리업무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됐다.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하고 범죄자의 고해상도 사진도 공개한다고 한다.

그동안 대책이 없어서 성범죄를 못 막은 게 아니다. 전자발찌 부착 강화, 화학적 거세 확대 등 각종 대책들이 속속 도입돼왔다. 애써 마련한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를 늘린

들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가 안 된다면 쓸데없는 일이다. 범죄자 정보를 넘치도록 쌓아놓아도 기관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강화된 법률적 토대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2. 위 사설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가 6월 19일자 23면에 게재한 3개의 사설 중 세 번째인 위 사설은 연합뉴스가 6월 18일 오후 3시에 송고한 연합시론 「성범죄 근절, 법률강화만으로 부족하다」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표절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의 리드 문장만 빼고 두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문장의 내용과 표현, 순서에 이르기까지 연합시론을 통째로 전재하면서 출처도 표기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일보는 연합시론의 도입부 10개 문장과, 일부 문장을 전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일보의 사설 원고량에 맞추어 연합시론의 전체 길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연합시론의 문장을 전재하면서 일부 문장은 접속사와 조사 등 극히 일부 표현만 고쳤다. 한국일보가 표현을 고친 일부 문장 사례를 보면, “... 현실에 맞게 개정된 건 환영할 일이다”를 “...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환영한다”로, “아직도 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은 너무나 문란하다”를 “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다”로, “강남 한복판에서 수 백 명의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특별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현실은 ...”을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수 백 명의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현실은 ...”으로 “이처럼 손쉽게 성을 사고 파는 현실은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흐릴 수 있다”를 “이렇게 손쉽게 성을 사고 파는 현실은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흐릴 수 있다”로 각각 바꾼 정도이다.

중앙 일간지가 이처럼 다른 언론사의 시론을 전면적으로 표절해 자기 사설로 게재하는 일은 그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사회의 공기로써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신문으로서 신문윤리의 기본을 어긴 것으로 신문의 책임과 신



뢰, 권위, 품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일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7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2.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5.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6.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7.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8.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9. 한국일보 발행인 박 진 열
10.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11.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12.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1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문〉

헤럴드경제 2013년 5월 27일자 9면 「“美 출구전략 성급”/스티글리츠 “美수 출경쟁력에 도움”」 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 5월 28일자 9면 「EU 반덤핑관세 중국편 드는 獨」 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5월 29일자 A8면 「이라크 연쇄 폭탄테러/66명 사망·200여명 부상」 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6월 10일자 15면 「터키 총리 “인내심 한계” … 강경진압 임박」 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6월 10일자 12면 「만델라 폐감염증 악화 … 재입원」 제목의 기사, 한겨레 6월 10일자 16면 「프

랑스 “극우폭력 관용없다” 단체해산 강경조치」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6월 11일자 8면 「열대우림 하층식생 잦은 화재/아마존 삼림파괴 ‘숨은 주범」 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6월 11일자 A18면 「“홍콩 날아가 3주 준비 … 호텔 문틈 베개로 막고 PC작업”」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6월 11일자 16면 「美 우방국들 ‘프리즘 첩보’로 자국민 사찰 의혹」 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6월 11일자 15면 「유엔, 사상 첫 대규모 인력 감축」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6월 12일자 14면 「中 선저우 10호 퀘도진입 성공」 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6월 12일자 12면 「중국 그림자 금융 대외충격 줄 수도」 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6월 12일자 A11면 「괴치 “투명성 위기 지속땐 강등압박 요인” 경고」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를 한다.

#### 〈이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5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양적 완화 조치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은) 오직 양적 완화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아직 정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며, 정상화되지 않는 것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연준의 양적 완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양적 완화가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증거가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며 “양적 완화가 가격 거품과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 기자」

(머니투데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후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태양광설비 무역 마찰을 끝낼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6일 베를린을 방문한 리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상황(EU의 중국산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을 문제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독일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실제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EU와 중국 사이 무역 분쟁이 모두에게 해롭다고 강조하며 EU의 반덤핑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과의 교역의존도가 상당한 독일은 EU-중국 간 무역분쟁에서 중국 편에서 있다. 권○○ 기자』

(매일경제)= 『27일 무려 10여 차례에 걸친 폭발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뒤흔들었다. 이날 연쇄 폭탄 테러로 인해 최소 66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해 2008년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상자 집계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아침 바그다드시 중심부 상업지구 사도운가에서 차량폭탄이 폭발했다. 이로 인해 행인 5명이 숨지고 인근 경비초소에 근무하던 경찰 4명을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 두 차례 큰 폭발이 시아파 거주지인 하비비아를 강타했다. 중고차 판매점 부근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12명이 사망했다. 한 목격자는 “군인들이 서 있었는데 차량이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알 말리프를 노린 폭탄테러는 6명 목숨을 앗아갔고 12명이 부상했다. 시 중심가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테러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 밖에 사드리아, 지스르 디알라, 샤아브, 마다인 지역에서도 연쇄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15명 이상이 숨지고 76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

이번 테러가 누구 소행인지는 오리무중이다.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

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 배후가 알카에다와 연계된 수니파 무장세력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기자』

(문화일보)= 『터키 반정부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가 강경 입장을 재확인해 진압작전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르도안 총리는 9일 수도 앙카라 에센보아 공항에서 열린 친정부 시위에 모습을 나타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반정부 시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버스를 개조한 간이 연설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은 그는 “(시위대는) 어떻게 나의 경찰들을 공격할 수 있는가”라면서 “국가의 총리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또 “문제가 있으면 대표를 뽑아서 시장이나 주지사, 또는 나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며, 시위 참가자들을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폭도로 규정했다. 또 “시위대 뒤에 숨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말로 이번 시위를 야당이 사주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7개월 뒤 치러질 지방선거로 판가름하자”고 말했다. “권리와 자유는 폭력이 아니라 법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날 아다다와 메르신의 친정부 시위에도 연달아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집권 정의개발당(AKP)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며 조기총선설을 일축했다. 중도진보성향의 일간신문 후리에트는 이번 주중 AKP가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 대규모 친정부 시위를 개최, 반정부시위에 맞불을 놓을 예정이라고 9일 보도했다.(후략) 오○○ 기자』

(세계일보)=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94·사진) 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폐감염증 재발로 두 달 만에 또 입원했다.

제이컵 주마 대통령의 맥 마하라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만델라 전 대통령의 폐감염증이 악화돼 오늘 오전 1시30분쯤 수도 프리토리아의 한 병원

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위중하지만 안정된 상태”라며 “전문 의료가 만델라 전 대통령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외부 도움없이 스스로 호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델라 대통령의 입원은 2011년 이래 6번째다. 앞서 만델라는 지난 4월 폐렴으로 열흘 동안 병상에 있었다. 그는 과거 민주화 투쟁 기간 옥살이를 하면서 채석장에서 노역한 이후 폐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입원 소식이 알려지자 만델라의 요하네스버그 자택에는 그의 쾌유를 바라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잭슨 음템부 대변인은 “만델라가 빨리 나아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야당 민주동맹(DA) 무시 마이마네 대변인도 “만델라는 남아공 국민의 아버지다.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슬프다”며 회복을 빌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병원에 입원한 넬슨 만델라를 응원한다’고 적었다. 미국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쾌유를 기원했다. 이○○ 기자』

(한겨레)= 『프랑스 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좌파 활동가를 때려 숨지게 한 극우단체에 해산조치를 내렸다. 프랑스 정부는 ‘공화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은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폭력에 무관용 대처를 다짐했다.

장마르크 에로 총리는 8일 좌파 활동가 클레망 메리크(19)의 사망과 관련된 ‘혁명적 민족주의 청년’(JNR)을 해산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내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마누엘 발스 내무장관은 “슬프게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반동성애 등 그런 움직임들이 다시 일고 있다”며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다. 앞서 발스 내무장관은 “극우세력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러한 폭력을 박멸할 단호한 결의”를 강조한 바 있다. 메리크 사망 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가장 강력한 어조로”로 그 공격을 비난한다고 말해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프랑스 명문대학 시앙스포의 재학생이자 반파시즘 활동가인 메리크는 지난

5일 파리 중심가에서 진행된 동성결혼 반대 시위 도중 벌어진 극우단체 회원과 반파시즘 활동가 사이의 충돌 와중에 맞아 숨졌다. 파리검찰청의 프랑수아 몰랭 검사는 메리크의 사망과 관련해 5명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에스테반이라는 20살 청년이 살인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몰랭 검사는 “에스테반이 메리크를 맨손으로 두번이나 때려서 땅에 쓰러뜨렸다고 경찰에 인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에스테반이 손에 브라스너클(손가락 관절에 끼우는 금속 무기)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몰랭 검사도 에스테반의 집에서 브라스너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후략) 정○○기자』

(경향신문)= 『지난 12년간 한국 크기만한 아마존 삼림이 타들어갔다.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열대우림의 ‘하층 식생 화재’ 때문이다. 하층식생은 숲의 아랫부분에 서식하는 식물 집단을 뜻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위성 관측을 통해 아마존 남부 삼림을 파괴해온 불의 존재를 찾아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연구진은 모디스라는 지구 관측위성을 통해 아마존의 건기(6~ 8월) 동안 삼림이 파괴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 결과 1999년~2010년 사이 하층식생 화재로 탄 면적은 8만5500km<sup>2</sup>, 아마존 전체면적의 2.8%에 이른다.(후략) 배○○기자』

(東亞日報)= 『미국 정보당국의 민간인 정보 수집 사실을 공개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29)의 폭로 과정은 할리우드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국가안보국(NSA) 하와이 지부와 계약 관계인 부즈앨런해밀턴, 델 등에서 일하며 연봉 20만 달러(약 2억26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린 그는 하와이에서 애인과 동거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렸다. 하지만 미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한 그는 하와이 NSA 사무실에서 기밀문서를 복사하고 ‘거사’에 들어갔다. 직장 상관에게는 간질 치료를 받는다며 휴가를 냈고 애인에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5월 20일 홍콩행 비행기에 올랐다.

홍콩에 도착한 뒤 3주 동안 호텔방에 머문 그는 차근차근 폭로를 준비했다. 그가 투숙 기간에 호텔방을 나간 것은 단 3회. 식사도 오직 방에서만 했다. 10년 가까이 미국 정보기관에 근무한 그는 미 정보기관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도청을 우려해 호텔 문틈을 전부 베개로 막았다.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혹시 방 안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붉은색 천을 뒤집어 썼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인 NSA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자신의 폭로로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파문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는 장면을 직접 본 그는 “미 정부가 나에게 간첩 혐의와 함께 미국의 적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죄목으로 어떻게든 나를 법정에 세울 것이란 것을 잘 안다”며 “하지만 이번 일은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가족 및 지인들. 그의 폭로 이후 NSA 요원들이 가족을 만나러 두 번이나 집을 찾았고 애인까지 조사했다. 그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미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나의 가족 및 친지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백○○기자』

(한국일보)=『주요 인터넷기업을 통해 국내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 프리즘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 우방국들도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이들 국가의 정부가 미국의 정보 수집에 협조한 뒤 첩보 내용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국내법에 금지된 자국민을 사찰했다는 것이다.

영국 감청 담당 정부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는 프리즘을 활용해 2011년 5월부터 1년간 전년대비 137% 증가한 197건의 첩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10일 “영국 정보기관은 의회의 적절한 감독 아래 법을 준수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도 “GCHQ가 법을 회피하려 다른 나라 정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상상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미



국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양국은 2차대전 이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 영국인이라면 이번 일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불법도청 피해자인 유명 인터넷사업가 킴 닷컴이 뉴질랜드와 미국의 정보공유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독일 국적자인 킴 닷컴은 세계 최대 파일공유사이트 메가업로드를 설립했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당국에 기소된 인물이다. 미국 이송을 거부하며 재판을 진행 중인 그는 정보기관이 자신의 통화내용을 도청했다고 주장했고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이 사실을 시인했다. 킴 닷컴은 프리즘 관련 보도가 나오자 “미국 정보기관이 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뉴질랜드 당국이 첩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9일 “정보 관련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9월 총선에서 집권이 확실시되는 호주 보수당은 “프리즘에 의한 호주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당은 “호주 정보기관이 미국의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 해명을 요구했다. 밥 카 외무장관은 9일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며 “(프리즘이) 호주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위해 통신사와 인터넷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법안을 추진하던 호주 정부의 노력이 이번 사태로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와 관련해 다음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마스 오페르만 사회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테러리스트를 감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독일 시민 전체를 감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다음달 시작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네스 슈보보다 유럽의회 의원은 “사생활 보호는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미국 정부의 확실한 보증이 없다면 FTA 협상은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자』



(서울신문)= 『유엔이 창설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 경제 침체에 따라 유엔 등 국제기구 예산이 축소되는데 따른 것이지만, 반기문사무총장의 임기 2기 개혁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0일 복수의 유엔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최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감축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감축 규모는 본부 기준 260명 선인 것으로 안다”며 “예산 규모가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인력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 유엔 본부에는 66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파견된 직원은 4만명 정도다. 본부에서 260명을 감축할 경우 본부 전체 인원의 4%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동안 유엔 내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일부 보직의 정리나 조정은 있었지만 수백명 규모의 감축은 없었다. 유엔이 이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은 예산 축소가 가장 큰 이유다. 한 소식통은 “당초 삭감됐던 유엔의 2012~2013년 예산이 전년 회계연도 규모인 54억 달러(약 6조원)로 복원됐다가 회원국들이 다시 1억 달러 이상 감축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예산 압박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기자』

(국민일보)=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0호가 11일 오후 5시38분(현지시간) 네이멍구 자치구의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여성 우주인인 양야핑 등 3명의 우주인을 태운 선저우 10호는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정(長征) 2호-F 로켓에 실려 발사 후 19분 뒤 예정 궤도에 도착했다. 선저우 10호는 앞으로 15일간 우주에 머물면서 우주정거장 실험 모듈인 텐궁(天宮) 1호와 자동 및 수동 도킹을 시행하고 각종 과학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전 우주선들과는 달리 우주정거장을 오가는 우주비행선처럼 사람과 화물을 텐궁 1호로 운반했다가 다시 지구로 실어 보내는 실험도 수행한다.

왕야핑 등은 지상의 학생들에게 ‘뉴턴 운동 법칙’과 무중력 상태의 물리현상

등을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하는 ‘우주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텐궁 1호의 고무 밀폐기와 배선을 교체하는 등 우주정거장 보수작업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중국은 선저우 10호와의 도킹 및 각종 우주실험을 마치면 임무가 종료되는 텐궁 1호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텐궁 2호를 발사하는 등 우주 개발을 추진, 2020년까지 자체 우주 정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맹○○ 기자』

(서울경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그림자금융(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또는 비은행 금융상품) 부실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돼 대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10일(현지시간) 중국에 수만개의 비은행 대출기관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기업과 정부에 엄청난 규모의 신용을 공여하면서 시스템리스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샤를린 추 피치 선임국장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이를 제도권 은행의 위협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중국의 일부 신탁과 자산관리 상품이 디폴트(채무불이행)됐음을 지적했다.

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은행이나 기업의 채권을 갖고 있거나 여기에 투자했던 외국 금융기관들도 손해가 불가피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이렇게 노출돼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위협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추 국장은 “이 같은 위협이 아직은 통제 가능하다”면서도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림자금융의 거품이 터지면 매우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그림자금융을 통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며 누가 빌리는지가 거의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통적 경고 사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신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투명하지 않거나 통제되지 않는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후략) 노○○ 기자』

(한국경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대출)’이 향후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신용평가사 피치가 경고했다. 그림자 금융이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까지 위협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살린 추 피치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에 있는 수만개의 비은행권 금융사들이 운용 중인 신용 관련 상품 대부분이 정부 통제권 밖에 있다”며 “투명성 위기가 지속되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림자 금융이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을 가로막아 결국 중국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연구원은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자 금융 위기는 결코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은행권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피치는 지난 4월 중국의 위안 화표시 장기채권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하고,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인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은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4월 말 기준 3조4426억달러·세계 1위)을 감안해 종전의 ‘A+’를 유지했다. 당시 피치는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은행권 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5.7%에 달하며, 불법적 대출을 포함한다면 GDP 대비 198%에 이를 것”이라고 강등 이유를 들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현재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각각 ‘AA-’, ‘Aa3’로 매기고 있다. 이○○ 기자』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각 신문사의 해외 특파원이 송고한 것이 아니다. 기사마다 각 국내 신문사 외신부(국제부)에 근무하는 기자 이름을 필명으로 단 것을 보면 국내 외신부(국제부) 기자들이 외신을 번역해 정리했거나 국내통신사가 전송한 기사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를 게재하고도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표절이다. 이같은 표절 행위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228 신문윤리강령 위반

####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 〈주문〉

朝鮮日報 2013년 8월 30일자 1면 「이석기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제목의 기사, 2·3면 「통합진보당(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 대화록(요약)」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경기동부연합 사람들이 중심이 된 RO(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한두 사람의 발언과 결의가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 모임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수많은 곡절을 딛고 우리가 동지부대를 이루고 미국 놈들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 책동을 분쇄하고 더 나아가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선두의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명예 아닌가”라고도 했다.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도 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무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스스로를 항일 무장투쟁세력과 비교하며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일부는 “우리가 남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도 했다.(후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30/2013083000271.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30/2013083000271.html)>

(2·3면)= 『(전략) ▲신원미상 남자= 전국적으로 미군 유류라인이(…) 넓어가지고(…) 헐어가지고(…)(중략)

▲이상호= 그래서 무작정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중략)

▲이상호= (중략) 철도 같은 경우도 철로의 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철도가 지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에요. 전화가 혜화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분당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갖다 관통하는 혜화동하고 분당에 있는데 거기에는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전공 상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후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30/201308300028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30/2013083000287.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RO(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참석자들이 발언한 내용을 녹취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스트레이트 기사와 회합 대화록 요약본이다.

朝鮮日報는 위 기사에서 입수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본지

가 입수한 이 모임의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며 발언 내용을 기술했고, 1면 소제목을 「‘지하조직 비밀회의’ 국정원 녹취록 입수」로 다는 한편, 회합 대화록 요약본을 실은 2·3면과 관련 기사를 게재한 4면의 면머리 제목도 「‘내란 음모’ 녹취록 입수」라고 달았다.

하지만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한국일보가 전날 밤 온라인 신문에 잠시 게재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디어오늘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A4 용지 62쪽 분량의 국정원 녹취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8월 30일자 신문에 특종으로 내보내기로 했으나, 녹취록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잘못으로 29일 밤 9시쯤 미완성분을 온라인 신문으로 출고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얼마 뒤에야 이 사실을 알고 요약본 기사를 황급히 내렸지만 이미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다음이었다는 것이다.

위 朝鮮日報 기사가 한국일보 요약본을 옮겨 적었다고 지적받는 이유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녹취록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원본과 다르게 쓴 표현이나 중복 문장, 오탈자가 朝鮮日報 기사에 그대로 게재됐기 때문이다.

위 朝鮮日報가 보도한 요약본 가운데 『신원미상 남자』라는 표현은 녹취록 원본에는 ‘미상남’으로 돼 있는 것을 한국일보 기자가 풀어쓴 것이라고 한국일보측은 밝혔다.

또 위 요약본 두 군데에서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등 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 역시 한국일보 기자의 실수였다는 것이다.

요약본 내용 중 ‘통신’과 ‘전화’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전공 형태’라는 표현도 ‘진공 형태’의 오기였다는 설명이다.

한국일보는 위 朝鮮日報와 같은 8월 30일자 신문에 「‘내란음모 RO 회합’ 본보, 녹취록 단독 입수」라는 제목을 달아 1면부터 5면까지 5개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타사 온라인판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전재했다 하더라도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93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3년 11월 4일자 2면 「결국 백기 든 이석채 ... ‘마이웨이’서 ‘론리웨이’로 ...」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헤럴드경제의 적시 사진은 인터넷신문 뉴스핌이 11월 3일 17시 44분에 인터넷 뉴스로 게재한 사진인데 헤럴드 경제는 이 사진을 전재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5 신문윤리강령 위반

광남일보 발행인 김 선 남

〈주문〉

광남일보 2014년 2월 11일자 15면 「SBS ‘별에서 온 그대’ PPL 과다 논란」 제



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유〉

#### 1. 광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지난 5일 방송된 ‘별그대’에서 천송이(전지현)는 영화 촬영 준비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본인이 직접 메이크업을 하는 열정을 보이는가 하면 “리얼한 액션을 위해 메이크업을 삼가 달라”는 스태프의 말에 공들인 화장을 다 지웠다. 이 과정에서 전지현이 모델을 맡은 한울의 기초화장품이 TV 화면을 가득 채웠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제품의 상표까지 그대로 노출하며 시청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

늘 빛나고 아름다운 전지현은 이 장면에서 ‘굳이’ 더 빛났고 ‘굳이’ 더 예뻐다. 스킨을 바른 뒤 긴 손가락으로 얼굴을 매만지고 거울을 쳐다보며 환한 미소를 띠는 모습은 순간 ‘내가 지금 CF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후략) 김○○ 기자』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남일보의 위 기사는 도입부 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아주경제가 2월 10일 오전 9시 34분 인터넷판에 올린 「‘별에서 온 그대’, 알고 보니 ‘별에서 온 PPL’」 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그런데도 광남일보는 위 기사를 자사기자 명의로 내보냈는데,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명백한 표절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월드 발행인 조한규

〈주문〉

스포츠월드 2013년 9월 10일자 「미란다 커, '노브라 패션' US오픈 결승전 관람 화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월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예] 입력 2013.09.10 13:04:09, 수정 2013.09.10 13:04:09

미란다 커, '노브라 패션' US오픈 결승전 관람 화제

미란다 커가 테니스 관람을 하면서도 섹시한 패션 감각을 선보였다.

미란다 커는 지난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2013 US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에 나타났다. 지난 6일 영화 시상회에서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시스루 노출 의상으로 화제가 됐던 미란다 커는 이날도 예사롭지 않은 패션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흑진주' 세레나 윌리엄스(미국)와 빅토리아 아자렌카(벨라루스)의 빅 매치가 열린 이날 미란다 커는 청바지에 헐렁한 민소매 상의를 걸쳤다. 특히 속옷 없이 민소매 상의만 입는 노출 패션을 선보였다.

미란다 커는 지난달 6일 '마드무아젤 C'의 시사회에 참석 도중 가슴이 노출되는 해프닝을 겪은 바 있다. 검은색 시스루 룩을 선보인 미란다 커는 팔을 드는 순간 가슴을 가리고 있던 검정색 레이스가 올라가면서 노브래지어 상태였던 가슴



이 훤히 노출된 것. 영국언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간을 포착해 커의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이날 US오픈 결승전에서는 세레나가 아자렌카를 2-1로 꺾고 US오픈 2연패를 달성했다. 스포츠월드 체육부』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130910022494&subctg1=25&cid=1140250000000](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130910022494&su bctg1=25&cid=11402500000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월드는 배우 미란다 커가 US오픈테니스대회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민소매 차림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인터넷판을 캡처해 사진을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위 사진은 연예전문보도매체 ‘스플래시 뉴스’에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국내 언론에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다.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보도하고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참고 : 데일리 메일 보도내용

〈<http://www.dailymail.co.uk/tvshowbiz/article-2415773/Miranda-Kerr-ensures-eyes-US-Open-goes-bra-skimpy-black-top.html?ito=feeds-newsxml>〉

## ▲ 2013-3026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월드 발행인 조 한 규

### 〈주 문〉

스포츠월드 2013년 10월 3일자 「입은 게 더 야해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위크

현장」, 10월 9일자 「“속 다 비치네?”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 쇼 현장」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월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입력 2013.10.03 11:49:53, 수정 2013.10.04 11:0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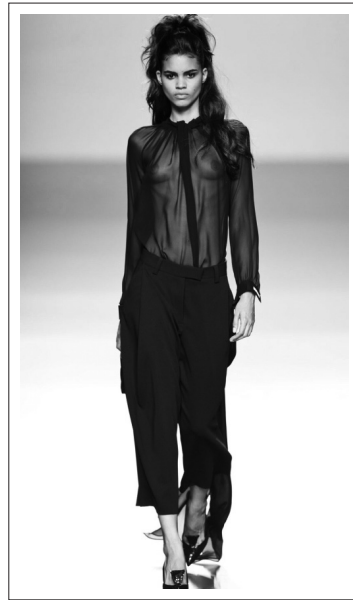
“입은 게 더 야해”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위크 현장



모델들이 14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 위크에서 디자이너 미구엘 파라찌오(Miguel Palacio)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http://www.funsw.com/Articles/PHOTOMOVIE/Article.asp?aid=20131003021297&c id=1140500000000>>

『[포토/동영상] 입력 2013.10.09 16:39:11, 수정 2013.10.09 16:54:33

“속 다 비치네?”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 쇼 현장



모델들이 14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 위크에서 디자이너 미구엘 파라찌오(Miguel Palacio)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PhotoMovie/Article.asp?aid=20131009022320&cid=1135200000000&subctg1=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월드리는 지난 9월 14일 보도된 AP의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쇼 사진을 보름여가 지난 뒤 10월 3일과 10월 9일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각각 게재하였다. 유두가 훤히 비치는 사진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실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당 사진을 게재한 해외사이트

<<http://www.leaderpost.com/life/fashion-beauty/Photos+Madrid+Fashion+Week/8913814/story.html>>

<<http://www.lavanguardia.com/de-moda/pasarelas/pasarela-madrid/20130915/54384507715/angel-schlesser-miguel-palacio-madrid-fashion-week-septiembre-2013.html>>

▲ 2013-302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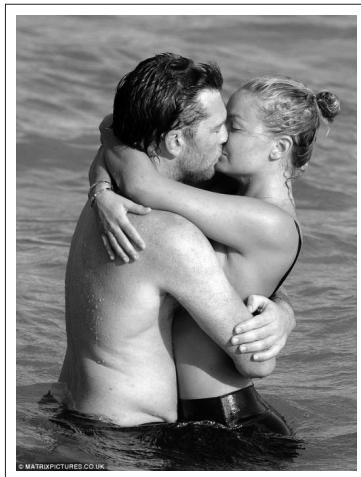
서울신문 2013년 10월 12일자 「[파파라치] ‘아바타’ 배우, 女모델과 진한 스킨십 포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파라치] ‘아바타’ 배우, 女모델과 진한 스킨십 포착

입력: 2013.10.12 | 수정 2013.10.12 16:36



영화 ‘아바타’ 주연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샘 워싱턴이 연인과 함께 휴양지를 찾은 모습이 파파라치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재 호주 출신의 모델인 라라 빙글(27)과 열애중인 그는 최근 호주 시드니의 바닷가를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바다에 들어가 서로를 깊게 껴안으며 키스를 나누는 등 애정을 과시했다. 특히 라라 빙글은 모델답게 검은색 비키니와 늘씬한 몸매를 한껏 과시했다.

열애를 시작한지 불과 한 달 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신혼 여행을 즐기는 부부처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한 샘 워싱턴과 라라 빙글은 즐거운 물놀이를 끝낸 뒤 해변에서 조깅을 하는 등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한편 영화 ‘아바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등에서 뛰어난 액션을 선보인 샘 워싱턴은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드리프트’에서 매력적인 서퍼로 분해 또 한 번 존재감을 뽐냈다.

2014년에는 정치인에서 영화배우로 돌아온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호흡을 맞춘 영화 ‘사보타지’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mailto:nownews@seoul.co.kr)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01260100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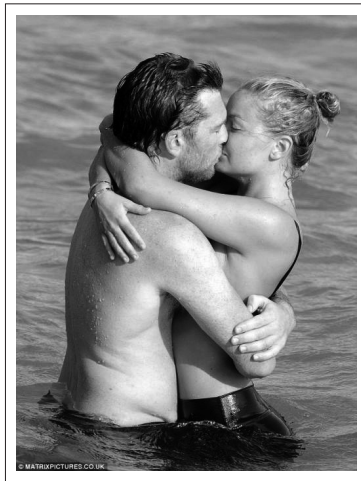
서울신문은 할리우드 배우 샘 워싱턴이 시드니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하면서 인용한 기사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내용은 영국의 데일리 메일 등 해외매체에 보도되었고, 게재한 사진은 데일리 메일이 게재한 사진을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진의 저작권자는 영국의 보도사진 전문매체인 <Matrixpictures>로, 해당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신 보도내용을 출처 없이 인용하고,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데일리메일 보도



<<http://www.dailymail.co.uk/tvshowbiz/article-2453920/Lara-Bingle-Sam-Worthington-embrace-kiss-sea-couples-jogging-session.html?ito=feeds-newsxml>>

■ 참고 : Matrixpictures.co.uk 홈페이지 해당사진 검색



▲ 2013-3029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서울신문 2013년 11월 11일자 「美 ‘야동’ 촬영시 ‘고글’ 착용도 의무화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美 ‘야동’ 촬영시 ‘고글’ 착용도 의무화 논란

입력: 2013.11.11 | 수정 2013.11.11 14:53댓글보기



최근 포르노 촬영시 콘돔 사용을 의무화한 미국 LA시에 이어 주(州) 당국이 한술 더 뜬 법안을 만들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부는 포르노 촬영시 콘돔 뿐 아니라 고글 착용까지 의무화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법안 AB 640을 업그레이드한 이 법안은 포르노 촬영시 방출되는 정액이나 피동이 상대방 입이나 눈 등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글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LA에서 발효한 포르노 남자 배우의 콘돔 착용을 의무화한 일명 ‘콘돔법’ 보다 더욱 강력한 철폐가 내려진 것. 당시 포르노 영화제작 업체들은 “콘돔을 착용한 배우들의 연기를 누가 보고 싶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우리도



배우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실제로 법 발효 이후 관련 업체들은 속속 짐을 싸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유독 캘리포니아주가 포르노 촬영에 민감한 것은 LA 지역이 미국 포르노 영화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야동의 메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간 캘리포니아주와 LA시를 상대로 한 에이즈 예방단체와 보건단체의 로비와 항의가 빗발쳤다.

새로운 법안 소식이 알려지자 유명 포르노 배우인 제시카 드레이크와 제임스 딘은 이를 항의하는 비디오를 만들었다. 실제 법안이 적용된 것을 가정하고 영화를 촬영한 것.

드레이크는 “왜 우리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영화를 찍어야 하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mailto:nownews@seoul.co.kr)」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1160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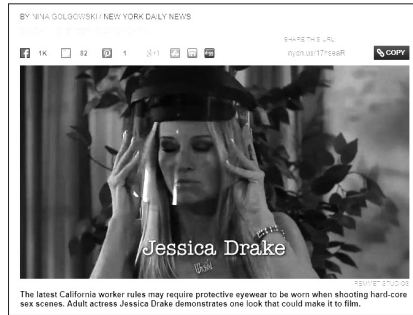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포르노 촬영시 방출되는 정액이나 피 등이 상대방 입이나 눈 등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글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인용한 기사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내용은 뉴욕 데일리뉴스 등 해외매체에 보도되었고, 게재한 사진도 같은 신문에 게재된 사진을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진의 저작권자는 <Remmet studios>에 있는 것으로, 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신 보도내용을 출처 없이 인용하고,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뉴욕데일리뉴스 보도



<<http://www.nydailynews.com/news/national/calif-law-porn-stars-don-goggles-sex-article-1.1512447#commentpostform>>

▲ 2014-3006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문>

조선닷컴 2013년 12월 18일자 「시위대 여대생, 진압 경찰 헬멧에 키스했다고 '성폭력'으로 기소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위대 여대생, 진압 경찰 헬멧에 키스했다고 '성폭력'으로 기소돼

조선닷컴

입력 : 2013.12.18 13:17 | 수정 : 2013.12.18 13:50

시위에 참여한 여대생이 대치 중이던 경찰의 헬멧에 입을 맞췄다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현지 언론이 16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니나 드 치프레라는 20세 여대생은 지난달 이탈리아 북부에서 다른 대학생·시민들과 고속철도 건설 반

대시위를 벌이던 중 스크린을 짜고 저지하던 한 경찰관의 헬멧에 키스를 했다.

이 장면은 취재 중이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찍혀 전국에 보도돼 ‘평화시위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이 최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탈리아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COISP’가 해당 여대생 시위자를 성폭력과 공무원에 대한 모욕 혐의로 토리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COISP 대표인 프랑코 마카리씨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경찰관이 그 여대생에게 키스를 했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이라며 “만약에 경찰인 내가 뒤에서 그녀를 톡 쳤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대생이 근무 중인 경관에게 한 행동은 그냥 묵인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키스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이번과 같은 상황, 즉 시위자와 진압경찰 사이의 그 같은 키스는 무례한 행동일 뿐”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성폭력과 공무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여대생은 경찰 헬멧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입술에 댄 손가락으로 해당 경찰관의 입을 만진 추가 ‘성폭력’ 혐의도 받고 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탈리아 여대생이 시위 중 진압경찰관의 헬멧에 입을 맞췄다가 성폭력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사는 앞서 보도한 동아닷컴 기사와 거의 같다. 또한 AFP가 단독보도한 사진의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리드를 포함한 앞부분의 문장은 동아닷컴 기사를 문장순서를 바꾸거나 줄였고, 접속사나 일부 단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형태만 바꾸었을 뿐 거의 그대로 전재하였다. 특히 뒷부분 세 문장은 거의 똑같다.

위 기사가 본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현지 언론 기사를 번역한 것이라고 추정

해 볼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 대부분은 시위 발생지역(토리노)에서 발간되는 신문인 'La Repubblica'지를 인용하였고, 이 신문에 실린 프랑코 마카리(Franco Mac-cari) 이탈리아경찰노조 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도 현지 라디오방송(라디오24 프로그램 'La Zanzara')을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을 인용한 동아닷컴의 기사와 비슷한 유형의 문장구조를 가진 이탈리아 언론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인디펜던트 기사에 'COISP'가 이탈리아 경찰을 대표하는 노조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프랑코 마카리가 이 단체의 사무총장이라고 명시됐음에도 동아닷컴이 "이탈리아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 대표 프랑코 마카리"라고 애매모호하게 번역한 내용이 일치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위 기사는 표절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내외 매체의 기사를 일부라도 전제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3.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 ▲ 2013-302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철휘

####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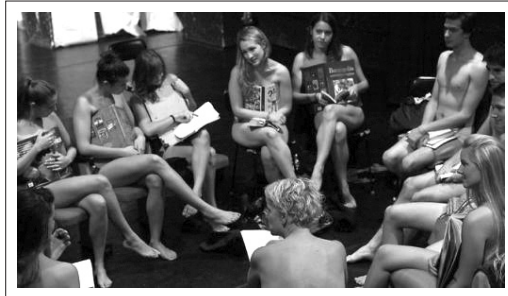
서울신문 2013년 10월 5일자 「미니스커트 금지하자 옷 벗어던진 여학생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니스커트 금지하자 옷 벗어던진 여학생들』

입력: 2013.10.05 | 수정 2013.10.05 18:51덧글보기



대학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지 말라는 등의 복장 규정을 통지한 학교 측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 대학생과 여교수가 옷을 벗어 던졌다.

헝가리 남부 카포스바 대학 예술대학 교수와 10명의 남녀 학생들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는 복장 규정에 항의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속옷 차림으로 수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이달 초 남학생은 짙은 색 정장에 신발, 여학생은 재킷과 블라우스, 바지 혹은 긴치마만을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학장 및 학교 측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미니스커트 등의 노출이 심한 복장이나 샌들을 착용할 수 없고 짙은 화장도 금지당했다.

한편 이들 학생은 오는 7일에도 샌들을 신고 수건을 걸치는 등의 새로운 복장 규정을 위반한 패션으로 수업에 임할 계획이다.

사진=멀티비츠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mailto:nownews@seoul.co.kr)』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00560101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헝가리의 한 대학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지 말라는 등의 복장 규정을 통지한 학교 측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 대학생과 여교수가 옷을 벗어 던졌다는 외신내용을 보도하면서 관련사진의 출처를 <멀티비츠>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은 <멀티비츠>가 보도한 것이 아니라 AFP 또는 Getty Images가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이다.(AFP와 Getty Images는 상호보완관계로 특정사진의 경우 서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다) 즉, 멀티비츠는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아 국내 보도 제공사진을 대행하는 에이전시일뿐으로, 보도매체가 아니다. 따라서 사진의 출처는 AFP/Getty Images/멀티비츠로 표기해야 한다.

또 멀티비츠로 표기할 경우 원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처를 표기하는 것은 일반 독자들이 <멀티비츠>가 보도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는데다 저작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사진게재와 관련, 원 저작권자의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원판사진을 다운받아 워터마크를 붙여 게재하지 않고 다른 매체에 보도된 사진을 복사하여 게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에이전시인 <멀티비츠>도 이 같은 사용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출처표기 및 게재 방식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③(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자료 : 영국 데일리메일에 게재된 똑같은 사진의 출처 표기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443951/Mini-skirt-ban-Hungary-university-prompts-female-students-turn-knickers-only.html>>

#### 4.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 ▲ 2013-1206 신문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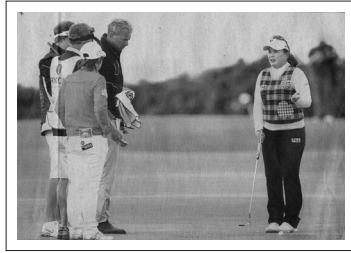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3년 8월 5일자 25면 「“공이 안 멈춘다” 강풍에 멈춘 브리티시여자오픈」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세계일보 8월 19일자 24면 「일 열도 정신 속 뺨 동방신기 ... K-팝 새 역사 썼다」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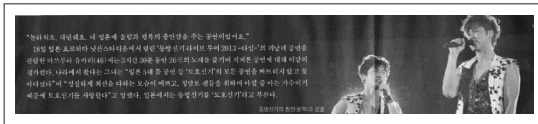
1.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가 게재한 적시 사진들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파이낸셜뉴스 8월 5일자 25면



〈사진 2〉 KB금융그룹 제공 사진



〈사진 3〉 세계일보 8월 19일자 24면



〈사진 4〉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

##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박인비의 후원사인 KB금융그룹이, 세계일보는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한 사진을 각각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29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2.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 〈주 문〉

새전북신문 2013년 11월 12일자 1면 「덕유산 향적봉에 핀 하얀 얼음꽃 '장



관」 제목의 사진 기사, 全羅日報 11월 12일자 1면 「향적봉 눈얼음꽃 만개」 제목의 사진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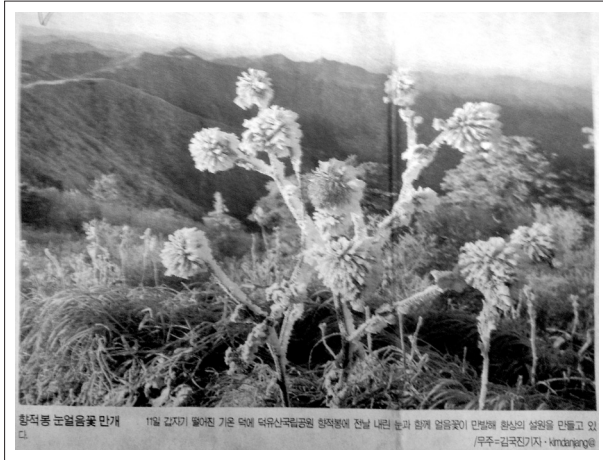
1. 새전북신문,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새전북신문)=



덕유산 향적봉에 핀 하얀 얼음꽃 ‘장관’ 덕유산국립공원(소장 정석원) 향적봉에 11일 얼음꽃이 만발해 환상의 설원을 연출했다. 이날 상고대는 새벽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승화해 나뭇가지에 붙으면서 생성됐다. 특히 소량의 눈도 내리면서 8부 능선까지 하얀눈꽃이 피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설원이 25일 늦어졌다. 덕유산국립공원 정석원 소장은 “향적봉 상고대는 국립공원 100선에 선정될 만큼 빼어난 풍경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며 올 겨울에도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주=이○○ 기자 \*\*\*\*\*@sjbnews.com

(全羅日報)=



향적봉 눈얼음꽃 만개 지난 11일 갑자기 떨어진 기온 덕에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에 전날 내린 눈과 함께 얼음꽃이 만발해 환상의 설원을 나들었다./무주=김○○기자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전북신문과 全羅日報의 위 적시 사진은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11월 11일 제공한 사진이다. 위 신문들은 이 사진을 각각 1면에 대형 사진기사로 전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 끝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1 신문윤리강령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2013년 7월 2일자 「[포토]머리 반쪽이 손상 … 말도 못해」 제목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투데이』

싸움에 휘말려 뇌의 일부분을 잃은 미국의 페인트공 안토니오 로페즈 차이(43)가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오고 있다. 차이는 술집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경호직원에게 머리를 맞아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말도 할 수 없게 됐다. 차이의 변호사는 이날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경호업체에 58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960965](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96096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함몰돼 뇌에 손상을 입은 미국의 페인트공의 소식을 전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AP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이투데이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비록 전재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출처 없이 게재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실는 것은 저작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2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월드 발행인 조 한 규

〈주문〉

스포츠월드 2013년 10월 20일자 「충격적 시스루 노출 패션쇼 현장 “다 보여줄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월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입력 2013.10.20 13:40:21, 수정 2013.10.20 13:56:59

충격적 시스루 노출 패션쇼 현장 “다 보여줄게”



모델들이 1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패션위크에서 현지 디자이너 안나 불빅(Anna Bublik)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PhotoMovie/Article.asp?aid=20131020021294&cid=1135200000000&subctg1=00&scrollTop=true>〉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월드는 우크라이나 패션쇼에서 시스루 의상을 입은 모델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유두가 훤히 비치는 사진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실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을 위반한 다른 기사들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kpec.or.kr](http://www.ikpec.or.kr)) 참조〉